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89
----------	-----

발의연월일 : 2008년 9월 25일
발 의 자 : 광영교 의원 외 7인

1. 주 문

-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으로 대전광역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국가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추진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은 소모적 논쟁과 진통을 최소화하면서 과밀화로 죽어가는 수도권과 공동화로 죽어가는 지방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국가 최대 역점사업이어야 함.
- 나. 그 당위성으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정책이행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신뢰받는 정부상을 구현한다는 점, 현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기조에 부합한다는 점, 배후 거점도시 대전권역 발전과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으로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음.
- 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위한 예산책정, 이전대상 정부부처 변경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법안 처리 등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수반되어야 함.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우리 150만 대전시민은 새 정부 출범 후 대전·충청권 홀대나 정국혼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절의 고장에서 살아온 후손답게 분노보다는 인내의 미덕으로 대국의 뜻을 기리며 정국상황을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인내는 우리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겨질 우려가 있어, 오늘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충청권 주민 모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며, 동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으로는,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은 효율적인 정부를 정책기조로 지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 정부는 과밀화로 죽어가는 수도권을 살리면서, 공동화로 죽어가는 지방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목적으로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면서 오랜 진통 끝에 만들어진 국가 최대 역점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정부부처 변경고시 지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 예산의 축소배정, 세종특별자치시 법안 자동폐기 및 처리지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건설 의혹과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추진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합니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은 현 정부가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준수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신뢰받는 정부상 정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전·충청권 주민과 현명한 국민 모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진통과 국민적 합의의 산물로 만들어진 결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런 합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불허의 정책변경은 대전·충청인 모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서 정부에 대한 극심한 불만과 염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끊임없이 확인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원칙과 신뢰를 준수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은 배후 거점도시 대전권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충청권역은 물론 수도권과 영·호남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소요될 예산책정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대상 정부부처를 조속히 변경 고시하고, 국회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세종특별자치시법안 처리 등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08. 9.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통령
2. 대통령실 정무수석
3. 대통령실 경제수석
4.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5.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
6.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7. 국무총리
8. 국무총리실장
9. 교육과학부장관
10. 행정안전부장관
11. 지식경제부장관
12. 환경부장관
13. 국토해양부장관
14. 국가정보원장
15. 국회의장
16.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17. 한나라당 대표(정책위원회 의장)
18. 통합민주당 대표(정책위원회 의장)
19. 자유선진당 대표(정책위원회 의장)
20. 창조한국당 대표(정책위원회 의장)